

한전공대법 국회에 '발목' 내년 정상개교 가능할까?

2월엔 처리해야 학생 선발 가능
민주당 해결 의지 있는지 주목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 법안(한전공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정상 개교가 어려워지는 것이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 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민주당·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져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임위 회부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디딤돌 격인 한전공대법안이 전남지사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180석 거대여당 체제에서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역 숙원 해결 의지는 물론 능력 자체에도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학생 및 교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단순 사

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입법 조치다.

해당 법안은 또한 부칙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 준공 후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대로라면 교사 확보가 돼 있지 않은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 인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 개교가 가능해진다. 제25조에서 학생 선발의 경우 대학 총장이 정하고 산업부·교육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은 내년 3월 대학 정상 개교는 물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며 "특별법이 2-3월 중 조속히 제정되지 않을 경우 6월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통한 학생 선발도, 내년 3월 대학 정상 개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20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과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당 차원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모집 등 정상 개교를 위해 2월 임시회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 사건 재판 종료 ... 靑 "다시는 이같은 일 없어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14일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특별 사면' 여부가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 여론을 들어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협뉴스



양동시장에 설치된 체온계.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온계와 소독제가 설치됐다. 14일 양동시장에서 상인과 방문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구 중앙병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병원 종사자 등 하루 12명 확진
시의사회 간호사회, 사과 담화문

소강세에 있던 광주에서 또다시 의료기관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주에선 시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질만 하면 병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인의 부주의 등으로 의료기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광주시 의사회·간호사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한다며 사과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의료인 방역의식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의 문이다. 타지역 대비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전남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는 모양새여서 지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2·6면〉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410명으로 늘었다. 2명은 효정요양병원 관련이며,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중이다. 사망자도 2명이 추가돼 누적 12명이 됐다.

광주에선 또 전날 밤사이 의료기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전날 자정까지 하루 동안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2명은 서구의 중형병원인 중앙병원 관련이다. 간호조무

사 확진을 시작으로 종사자 4명, 입원환자 7명, 가족 1명 등이 감염됐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48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37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보건 당국은 현장진단평가를 시행해 내원 환자와 방문객 전수 조사,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파악했다. 확진자는 이 병원 5~6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층과 분리했다. 9개 진료과에 69병상 규모인 중앙병원의 입원환자는 27명, 종사자는 23명이다. 입원환자 27명은 5층(21명)과 6층(6명)에 분산됐다.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누적 136명에 이른다. 광주 일일 확진자 수는 11일 7명, 12일 4명 등 이틀 동안 한 자릿수를 보였다.

양동호 광주시 의사회장, 김숙정 광주시 간호사회장은 이날 의료인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사회,

간호사회는 "요양시설, 병원에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3500여 의사회원, 9000여 간호사회원,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오전 사이 나주 5명, 순천 2명 등 총 7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22명으로 늘었다. 나주에서는 전남 613년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 일가족 3명(616-618번)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주 619번과 620번 확진자는 부부 사이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부산 소재 종교시설 방문 후 증상이 발현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순천에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전남 615번과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빛원전 1·2·3호기 2034년까지 폐쇄 ▶6면

복스-사리저기는 풍경을 '한국음식' ▶14-15면

제주에서 봄을 기다리는 호랑이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점서 (062)226-0001 & 화평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매곡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점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대로 516(수원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항대동 603번길 20(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당동로 520(수원동)

장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G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 복합연비:13.2리터/100km(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 복합연비:13.2리터/100km(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 복합연비:10.2리터/100km(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 복합연비:10.2리터/100km(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